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변화 동향

◆ 스위스 기후 기금 헌법개정안 동향(주스위스대사관)

- 스위스 시민당과 녹색당 등 좌파 정당이 발의한 '기후 기금 이니셔티브'는 헌법 개정안으로 스위스 연방정부가 2029-2050 기간 매년 국내총생산(GDP)의 0.5-1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후 기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함.
 - ※ 2024년 스위스의 GDP는 약 8,500억 스위스프랑이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간 1%의 경제 성장률을 가정하면 2025년 GDP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1조 1,000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추산
 - 발의안에 따르면 동 기금은 △교통, 건물, 경제의 탈탄소화 △에너지 효율 향상 △재생에너지 확대 △추가 교육 및 재교육 △생물의 다양성 증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
 - 발의자들은 스위스가 2050년까지 법적으로 규정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 투자 비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기후 피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주장
 - 헌법개정안이 가결되어 2029년부터 연평균 50억-100억 스위스프랑이 기금으로 유입되면, 2050년까지 기후 기금은 약 1,000억-2,000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추정

온실가스 감축

◆ 덴마크 탄소 포집·저장(CCS) 정부보조금 입찰 관련 동향(주덴마크대사관)

- 덴마크 에너지청(DEA)은 2024.10월 탄소 포집·저장(CCS) 정부보조금 입찰 절차를 개시하여, 2025.5월 사전 자격평가를 통해 16개 신청 기업 중 10개 기업에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, 2026.1월 현재 기준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참여 중단 의사를 표명함.
 - ※ 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30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, 2029-2044년 기간 총 287억 DKK 규모의 CCS 정부보조금 풀(CCS Pool)을 조성하였으며, 덴 에너지청은 2026.4월경 최종 계약 수여를 목표로 입찰 협상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.
 - 참여를 중단한 기업들은 △입찰 개시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 △현행 입찰 조건 하에서의 수익성 확보 곤란 △기한 내 계약된 포집량 미달성 시 벌금 부과 리스크 △여러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촉박한 입찰 일정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
 - 이와 관련, 덴마크 녹색정책 싱크탱크인 Concito는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이 덴마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, Ørsted, CIP 등 대기업마저 참여를 포기한 상황을 지적하면서, 정부가 기업 의견을 반영한 리스크 완화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
- Lars Aagaard 덴마크 기후·에너지·유틸리티부 장관은 2025.12.30. 성명을 통해, CCS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로서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, 동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CCS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향후 덴마크의 다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함. 끝.